

이재명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 정치권 논란 증폭

민주 "정황제보 있다...경고 차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도 거론 야 "계엄준비 위해 사람 앉혔나" 한 "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 문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언급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자, 국민의힘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가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

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묻는 말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준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

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의혹이 거론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국방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안했나"라고 추궁했다.

추미에 의원도 "항간에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 후보자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꼬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문회는 사실이 아

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을 하고 정치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 선포 우려가 어불성설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혼란 상황일 때 가능하다"며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데 계속 계엄령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대표는 "내 귀의 도청장치와 다를 바 없다"며 역공을 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차차가 언제냐"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 계엄을 준비

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주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제22대 국회 개원식. 위원은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1면 뉴스

광주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우원식 "조속한 통과 힘쓸 것"

광주시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서 전달에는 신수정 의장, 서용규·채은지 부의장, 정다은 운영위원장 등 16명의 광주시의회 의장단 및 의원들이 참여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자치 출범 3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확대·강화, 사무기구 조직권·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의원 1인당 1명 확대 등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광주시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제출한 법안은 국회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현 기자

김문수 도의원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사진)은 2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농산물 식품 원료 51종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 할당을 지속하면서 국내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TRQ를 통한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농어민 소득을 붕괴시키며 농어촌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과일 28종에 대한 관세 할당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농민들은 자율적인 수급 조절 능력을 잃고 소득까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붕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조국 "곡성·영광 재선거서 민주와 치열하게 경쟁"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단일화 지역정치 활기·지방정치 혁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10·16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두 당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의 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좋은 일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경쟁은 나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호남에서 양당이 경쟁하면 지역 정치가 활기를 띠고 지방 정치가 혁신되며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며 "조국혁신당이 승리하면 현 정권을 퇴출하기 위한 힘은 더 강해진다.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철두철미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야권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맞설 것"이라며 "이곳은 역대 8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7번 이긴 험지지만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겠다.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인천 강화군수 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며 "그래서 승리의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은 법상 후보를 내지 못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만든 혁신 교육 정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의료대란특위 "尹 어느 나라 사나"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석을 앞두고 대한응급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비상 상황 및 정부 정책 실태를 점검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한응급학회 관계자들과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열고 "대안을 함께 점검하고 도움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재유행,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심각한 국민의료 대란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이 심각하다"며 "의료 현장에 가봐라, 별 걱정 없다고 한 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말한다) 전장하는 것도 아닌데 승부처럼 생각하는 관료까지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의료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응급의료 체계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가보면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듣고 많은 국민이 '어느 나라에 사는 거냐'고 했다"고 말했다.

대한응급학회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대란 실태를 전하며 국회 차원의 의정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의료특위는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비용 관련 대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